

제333회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임시회·폐회중)

국회사무처

일 시 2015년6월4일(목)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 1.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심사된 안건

- 1.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1

(14시11분 개의)

(14시14분)

○위원장 이병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국회(임시회·폐회중) 제8차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국회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중 출판기념회 제한 문제, 후보자 사퇴등과 관련된 선거보조금의 반환 문제, 후원회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문제 등 개정안의 내용에 관해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위원회 심사 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청회 실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발제자들을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 진행 방식을 말씀드리면, 먼저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등 다섯분의 진술인으로부터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의 전반적인 개정 방향에 대하여 각각의 발표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참석한 진술인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지요.

오늘 공청회는 국회법에 따른 우리 특별위원회회의이기 때문에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에게 요청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한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호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에는 임성학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대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인사)

감사합니다.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하신 분들의 자세한 경력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발제자로부터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실시하고 발표 시간은 진술인별로 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

니다.

먼저 강원택 교수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강원택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강원택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자리에 진술인으로 오게 되어서 영광이고 또 기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총선이 있기 전에 이런 형태의 정치 개혁과 관련된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판결 이후에 근본적인 형태의 정치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번 특위에 참여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전보다도 조금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근본적인 한국정치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안별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법 관련해서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2004년 정치 개혁으로 지구당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때 지구당이 폐지됐을 때 물론 ‘돈 먹는 하마’라든지 여러 가지 ‘돈 선거’와 관련된 주범으로서 지구당이 비판을 받았고 그런 결과로 결국 폐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적절한 조치였느냐, 그다음에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느냐 이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제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구당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실은 지구당의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서의 어떤 규제 조치를 통해서 지구당의 운영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돈이 덜 드는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도록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대의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결국은 국민들의 참여, 그다음에 정당을 중심으로 한 참여를 통해서 그리고 조직을 통해서 정치적 의사가 형성이 되고 또 전달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정당의 제일 하부 조직인 지구당을 아예 법으로 강제해서 폐지한 것은 옳은 방법이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그것을 법

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각 정당별로 유연성 있게 새로운 조직의 형태를 갖추거나, 혹은 폐지하고 싶다면 그것의 폐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일이 더욱더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하위 단위에서의 정치적 결집은 상당히 어려운 형태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구당 폐지가 가져온 또 다른 폐단 중 하나는 현역 의원들과 경쟁자들 사이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의원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구당이 없다고 하더라도 큰 불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경쟁자들은 그러한 형태, 동일한 입장에서 정치적 경쟁을 펼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처음부터 제도적으로 불공정한 경쟁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지구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구당 폐지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지역주의 정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예컨대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호남이 될 것 같고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영남이 될 것 같은데 상시적으로 존재하는 지구당이 사라지게 되면서 그 지역 내에서의 정당활동은 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남에서의 새누리당은 사실은 조직 자체가 와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새정치민주연합도 영남에서 마찬가지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두 정당이 자기들이 패권을 갖고 있는 특정지역에서의 정치적 지배를 강화시키는 의도치 않은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지구당은 반드시 부활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역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형태로 현재의 정당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고 또 중앙당은 수도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규정으로 인해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중앙 수준에서는 양당 혹은 3당 이런 다당 간의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역 수준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일당 지배

체제가 지금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혹은 영남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효과적인 대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다당적인 경쟁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지역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만 유권자의 신뢰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적어도 지방선거, 정 어렵다면 지방선거에 한해서라도 지방에 기반을 둔 정당의 출현을 허용하는 형태로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관련된 것을 한번 뒤져 봤더니 원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지금 계류 중인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지방선거에 한해서라도 그런 형태의 다당적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이거는 각 정당마다 서로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당론으로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면 못지않게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는 반대의 입장인데 그거는 당마다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법제화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원하는 정당만 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2개 정당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정당이 등장하게 될 텐데 그 정당이 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규제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은 옳지 않고 또 바람직한 정당 발전에서도 다원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원하면 새누리당은 하고 그것이 싫은 정당은 하지 않고 각 정당이 스스로 판단해서 당론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다음은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도 그렇고 선거법이 규범 수준이나 이상 수준이 너무

강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에는 돈이 든다는 거지요. 그걸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자,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사실은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현실적으로 정치에 돈이 든다면 그 돈을 모금하고 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많은 허용을 하되 그 정치자금의 출입과 관련된 데 대한 규제를 좀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드는데 억지로 돈을 안 쓰도록 혹은 못 모으도록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불필요한 규제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 본다면 민주주의 경쟁의 원리로 본다면 내가 원하는 정당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정치인이 당선되기 위해서 내가 선거운동도 하고 표도 던져 주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그런 똑같은 목적을 위해서 제가 돈을 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금 방법이라든지 또 모금의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과감하게 상향 허용할 필요가 있고 대신 그 모금의 방식, 모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번 정치개혁을 통해서 폐지됐던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후원회도 저는 부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실 오프라인상에서 할 수 있는 개인 후원회도 허용을 하되 지금 현재 편법적으로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는 출판기념회 방식은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제도로써 보장을 하자 그리고 투명성을 거기에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게 훨씬 더 나은 방향이다 하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교섭단체에게만 유리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국고보조금 방식을 개선해서 이전 선거에서의 득표율에 따라서 각 정당별로 배분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시간 동안, 제가 이거는 정당법보다는 선거법과 관련된 측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이전보다는 비교적 큰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또다시 이번 한 번의 미봉

책으로 끝내지 말고 차라리 이번 기회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폭 보강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지역구 의원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준으로까지 의원 수를 늘려서 원천적으로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 여론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치 리더라면 여론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설득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진술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강원택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명호 교수님께서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명호 동국대학교 박명호입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당제도와 정치자금제도는 선거제도의 영향을 중요하게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에 대한 논의가 어느 정도 완결된 다음에 좀 더 기술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것이 정당제도와 정치자금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중심의 선거운동이나 정치보다는 정당 중심의 정치와 선거운동, 개별 정치인 중심의 정치자금보다는 정당 중심의 정치자금제도를 지향한다는 전제에서 정당과 정치자금제도에 대한 개정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 폐지된 이후 현재까지 지구당은 폐지된 상태로 유지돼 오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던 것처럼 2004년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른바 돈 먹는 하마로 불렸고 고비용 저효율의 대명사로 불렸던 지구당을 폐지한 것은 당시로서는 명분은 충분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가 선거구당 1인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단위 조직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300명을 기준으로 한 19대 국회의 경우 246개 지역에서 246명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따라서 지역단위, 선거구단위에서의 조직이 없이 과연 선거가 가능하겠느냐? 그 이름을 지구당이라 부르든 당

협이라 부르든 지역위원회라 부르든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그와 같은 조직적 필요성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는 이것을 차라리 양성화해서 관리의 투명화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런 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2004년 지구당이 폐지되자마자 1년 후에 바로 임의조직으로서 당협이 인정된 것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당협의 존재는 현직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 간의 불공정 문제를 야기하고 또 범외 임의조직으로서의 당협의 불법·탈법 운용이 사실상 만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제도의 틀 안으로 양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가 지구당 폐지의 명분이었던 정치자금에 관련한 부분, 이와 관련해서는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에 지구당 차원에서의 투명성이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의 또 하나의 조건으로서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정당화, 과두화되는 방향을 가능한 지양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개방적 운용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지구당 부활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서 선거제도에 따른 정당제도의 변화를 말씀드렸는데 거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하는 비례대표제를 하게 된다면 지구당제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200개든 246개든 지역단위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는 그 지역단위에서의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를 양성화해서 관리를 투명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정당설립 요건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앞서 강원택 교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당설립 요건이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습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또 국민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로서의 정당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와 더불어서 중앙당의 소재지를 현재처럼 수도로 명문화한 것을 폐지하여 지방정당 또는 지역정당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정치자금의 현실화와 모금·사용의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정치자금의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인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정치자금 공급원의 현실화 또는 다양화는 정치자금 모금과 사용의 투명성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선관위가 제시한 법인과 단체의 선관위 정치자금 기탁과 정당의 후원회 부활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조치들은 역시 다양한 투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전제로 할 때 이와 병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정당의 국고보조에 대한 의존도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당 스스로 재정적인 자립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자활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또 정치적 지지를 돈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 중의 하나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출판기념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판기념회가 정치인들의 편법적이고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조달 창구로써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작년 한 통계에 따르면 2013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9월 한 달 동안 개최된 출판기념회가 45회로 같은 해 1월부터 8월까지 열렸던 출판기념회 41회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가 집중 개최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출판기념회의 경우에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정치자금을 모으는 기회로서의 출판기념회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치자금 모금 방식의 하나로 출판기념회를 인정하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선관위에 신고하고 그 내용을 공개해서 정치자금의 하나로 취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출판기념회에 대한 다른 하나는 이것이 선거운동의 일환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의 출판기념회 횟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출판기념회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관리를 정치자금법을 통해서 엄격하게 하면서 선거운동으로서의 출판기념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 사퇴 등 관련 선거보조금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치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것 중의 하나가 후보자의 중도 사퇴와 연대에 따른 유권자의 혼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탄과 동시에 정치공학적인 또는 정치적 해결책, 나름의 정치적 방안으로서의 양면이 존재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고보조라고 하는 돈이 투자되는 한에 있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후보자 사퇴 등 관련 선거보조금 반환 등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박명호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윤석근입니다.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신 정개특위 이병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진술할 내용은 현재 정당·정치자금 제도와 관련해서 정치·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과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당제도와 관련해서 주요 이슈들은 지구당 부활 문제, 공무원의 당원 가입 허용 문제, 지방정당 허용 문제, 당내 경선의 공정성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먼저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서 진술자 두 분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구당을 부활하여야 한다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당을 허용하는 입장입니다.

과거 지구당을 폐지했을 당시와 조금 달라진 사회환경, 법제도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과거 지구당이 있었을 때는 경조사 경비로 상당

부분 지구당 경비들이 지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법에서 상당 부분, 경조사에 대해서 일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의 하부구조가 취약해짐으로써 또 정당구조 자체가 취약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문제들, 또 현역과 비현역 간의 기회 균등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지구당' 하면 상당 부분 예전의 폐해들이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서 구시군당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 허용 문제입니다.

선거 때마다 선거 끝나고 나서 등장하는 것은 관권선거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정치활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정개특위를 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이슈되는 것이 정당의 당원 가입을 언제까지 금지할 것인가, 공무원의 후원금 기부, 과연 금지하는 것이 맞나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외국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의 경우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의 구분이 그렇게 명확히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허용하더라도 과연 공적인 영역에서 직무활동을 하면서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인가, 공무에 정치활동 부분들이 투영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우려됩니다.

다음은 지방정당 허용 문제입니다.

앞 진출자 두 분께서 지방정당을 허용을 해야 한다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조심스러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연방국가이거나 또 다민족국가이거나 영토가 넓은 국가의 경우에는 지방정당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것이 국가 사회적인 주요 과제인데 정치영역 부분에서 지역주의를 더 강화시킬 위험이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지방정당을 허용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방정당 허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실 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돼야 될 것이다 하는 점입

니다.

다음은 당내 경선의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당내 경선은 공직선거 후보자를 선출하는 정당의 당내 경선 또 정당의 대표자와 당직자를 선출하는 당내 경선, 두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직 후보자의 경선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미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당 대표 경선을 포함한 당직자 경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정당의 당내 경선은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나 저보다도 오히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당법에서 정당의 당내 경선을 보는 관점은 정당의 매우 자율적인 재량에 맡기고 있습니다. 매수 같은 것, 이런 경우 외에는 특별히 정당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제도화시켜서 법률로 규제할 것인가, 또 어떤 부분을 정당의 자율로 맡길 것인가, 이 부분도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정치자금 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젖줄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동전의 양면, 필요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정치자금을 보는 시각은 우리 국민들이나 언론이나, 또 동전의 양면, 필요악 이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규제적입니다. 민주주의의 젖줄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면 상당히 넉넉하고 편안한 그런 제도로 가져갈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정치자금법이 매우 규제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정치자금이 흐르는 통로가 좁으면 좁을수록,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그 범위가 적으면 적을수록 제도 바깥에서 부정한 돈이 흐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를 적정하게 확보를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정치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그 정치자금의 통로는 유리관처럼 투명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기념회 또 이른바 쪼개기 문제, 또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문제, 후원금 모금 한도액 문제, 국고보조금의 투명성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판기념회 관련입니다.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할 것인가, 출판기념회는 개최를 허용을 하되 정가 판매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출판기념회에서 주고받는 금품을 정치자금으로 봐서 정치자금 제도의 틀 안으로 가져올 것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은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따라서 정가 판매만 허용을 하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회계보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자 하는 논의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쪼개기와 법인·단체 기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른바 쪼개기라고 합시다만, 좀 거친 표현이기는 합시다만 쪼개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법인·단체의 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임원의 명의로 하는 것들, 두 번째는 고액 기부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서 하는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고액 기부를 금지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가져야 될 정책 방향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법인·단체의 기부를 계속 금지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기업의 기부는 여전히 정경유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먼 장래에 경제 부분이 투명해지고 정치 부분이 투명해질 때 그때는 법인·단체의 기부도 우리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 하는 것처럼 허용을 해야 될 때이기는 합시다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단체의 기부에 있어서는 앞 진술자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개인의 기부가 허용이 된다면 단체의 경우에도 정치활동의 자유, 정치 참여의 자유, 그런 의미에서 후원금 기부를 어느 부분 허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단체의 기부가 허용이 되더라도 그 돈을 어느 단체가 어느 정치인에게 얼마의 금액을 기부했는지, 또 그 금액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국회의원이거나 그 정치인은 입법활동이나 의정활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이 세세히 공개되어서 유권자들과 언론으로부터 당부당을 평가받

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후원금 모금한도 적정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액 1억 5000만 원이 지금 26년째 됐습니다. 1989년에 1억 5000만 원이었다가 중간에 3억 한 번 났다가 지금 10년 전에 또 1억 5000으로 됐습니다. 10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감안을 하더라도 삼십오륙 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억 5000만 원 돼 있는 것을 2억 정도, 10년 정도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자금의 통로를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결국 유리관처럼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투명화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상당 부분 많이 투명화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지출이, 또 모금이나 지출이 이루어지고 나서 빠른 시일 안에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공개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액 기부의 경우에는 인적사항이나 자금의 출처들이 세세히 공개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정당에서 국고보조금 지출하는 것이 그렇게 방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것이 문제가 되냐 그러면 국고보조금하고 정당이 운영하는 당비, 그것이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되어서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대로, 정당에서 자체경비, 당비는 당비대로 따로 지출이 되고 따로 보고가 되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더욱더 공개를 철저히 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상당한 투명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말씀드린 내용들이 위원님들의 정당·정치자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와 입법정책적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저의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병석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님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성학 교수님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임성학 서울시립대 임성학 교수입니다.

먼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이렇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기본적으로 오늘 진술 내용들이 정치개혁의 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정치자금 관련해서 연구를 주로 하기 때문에 정치자금 관련해서 주로 발제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한국 정치자금의 한국 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많은 국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었는데 2004년 정치관계법 개혁과 함께 사실은 굉장히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재는 어떻게 보면 정치자금 관련해서 큰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이 정치자금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건가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될 시기가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정치자금을 어떤 규제의 대상이나 어떤 불법을 막는 하나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한국 민주주의의 심화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해야 하는 시기에 왔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문제에 가장, 지금 한국 정치에서 제가 최근에 느낀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사실상이 정치자금 문제가 결국에는 어떤 정당, 국회,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어떤 도덕성에, 잘못된 비현실적 정치자금 제도에 따라서 정치권의 도덕성에 큰 타격을 줌으로서 사실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정치자금의 현실화를 통해서 보다 발전된 민주주의와 그다음에 국정운영의 원활화를 위해서는 이번에 꼭 새롭게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의 현재 상황인데요, 사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라고 말이 많을 정도로 이 정치자금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에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개선이 있었지요. 특히 정치자금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그다음에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많은 개선이 있었습니다.

돈 먹는 하마라는 지구당을 폐지했고요, 과거 조직 동원형 고비용 저효율 선거운동을 매스미디어를 이용한 저비용 고효율 선거방식으로 전환해서 선거비용도 급격히 줄었습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는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했고요, 후원회 모금 한도를 하향 조정했으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회계보고 제도를 강화하고, 수요와 지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했습니다. 결국 정치자금과 선거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불법 정치자금의 소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저비용의 정치자금 제도가 정착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 측면에서, 정치자금의 이 새로운 제도가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는 한 측면도 있겠지만 또 반면에 퇴보한 측면도 있다는 점입니다. 전반적으로 정치적인 영역이 사실상 축소되고 있고 정치적 활동이 많은 제약을 받게 돼서 결국에는 민주주의가 위축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당이 폐지돼서 정치자금의 근본적인 수요는 줄었지만 정당정치에 뿌리가 사라졌고, 유권자의 정치인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민의의 수렴과 전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정당과 정치인, 국회가 국민의 대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비용의 상한액이 낮은 수준에서 정해져 사실상 정치적 형평성이 보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치자금의 이런 것들이 소수 정당이나 신인 정치인들이 갖고 있을 하나의 경쟁력도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정치나 선거자금 제도의 개선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크게는 정치자금 제도의 현실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치자금 제도의 규제 완화, 세 번째는 투명성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정치자금 제도의 현실화는, 몇 가지 예를 좀 들었는데요, 사실 지금 새로운 정치적 흐름, 결국 많은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후보자를 뽑거나 후보자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여러 정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까지 생각할 정도로 직접적 참여를 많이 유도하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를 후보자들이 직접 해야 되는 경우 한 번에 몇 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또한 요즘에 선거 유세차를 대부분이 사용하시는데 선거 유세차가 적게는 2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이 든다고 하고요. 기본적인 사무실, 선거사무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컴퓨터나 사무용품이나 선거운동원 고용이든지 다양한 분야에 많은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선거자금,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액수는 제한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선거운동 규제를 좀 풀고 선거운동 기간도 늘리는 것이 아마 대세라고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고 규제가 풀어진다면 정치자금에 대한, 선거자금에 대한 수요도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실적으로 선거자금이나 정치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현실적 제도를 만들어 놓고 많은 정치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당선된 후보자도 나중에 잘못된 정치자금에 의해서 도덕적 타격을 받고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현실화가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정치자금 제도의 규제 완화입니다. 사실상 과거에는 정치자금의 수요나 공급의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타이트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새로운 방식의 정치자금 모금, 새로운 방식의 정치자금 지출과 수입 같은 것들을 다양하게 창의적이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정치적인 신인이 발굴되고 새로운 정치적인 쇄신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치자금 제도의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투명성 강화입니다.

투명성 강화는 기본적으로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지금 현재 제도가 30일 이후에 공개하게 돼 있고, 직접 가서 열람하거나 복사를 해야 되는데 공개 기간도 3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일반 국민들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정확히 안다면 정치자금의 규모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인데요, 현재 가장 큰 문제가 출판기념회의 불법적 정치·선거자금 모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출판기념회가 당내에 주요 선거가 있을 때에 기본적으로 당내의 중진들이 당내에 필요한 선거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사용됐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많은 의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판기념회 자체를 금지하는 건 사실상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를 제도적으로 막는다는 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대신에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판매금액이나 이익은 지금 국회의원들이 영리를 못 하도록 하는 전체적인 취지에 따라 그 이익이 발생한 부분은 후원회 수익으로 잡도록 한다면 큰 문제없이, 그다음에 후원회 수익은 결국 선관위를 통해서 회계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내용과 출판기념회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좋은 발표를 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성대 교수님 10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조성대 안녕하세요?

한신대학교 조성대 교수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의 견해가 국가 발전에 공헌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역시 정치자금법 관련해서 준비를 해 왔는데요. 그전에 앞서서 진술인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법에 관해서 제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치자금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구당은 저 역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구당은 정당의 토대이기 때문에 없애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에 정치자금법과 관련해서도 지구당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 정당을 허용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전에 선관위 측 진술인이 지역주의 때문에 지역 정당이 허용되는 것이 조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 정당은 그야말로 지역 현안을 가지고 유권자들이 스스로,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할 수 있는 정당입니다.

따라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역주의적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현재의 정당법, 정당 설립에 관한 정당법이 일정하게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왜 꼭 중앙당이 서울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5개 권역 이상의 당원들 1000명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민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라는 생각에서 지역 정당은 허용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약간의 타협점은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시적으로나마 지역 정당이 지역 의회, 지방의회에 진출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은 타협점으로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자금법에 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의 67페이지부터 검토해 주시면 되는데요. 크게 공급자적 측면과—정치자금을 공급하는 사람들의 측면, 즉 기부자의 측면이지요.—그리고 정치자금이 필요한 사람—수요자—의 측면 그리고 정치자금을 규제해야 되는 사람—규제자—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공급자의 측면인데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법인 및 단체의 기부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개인이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적으로 표현의 자유 영역입니다. 따라서 개인이 표현의 자료를 누릴 수 있듯이 단체 또한, 개인이 결사의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단체 또한 정치자금의 기부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마 민주주의적 원리에 가장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은 일정하게 좀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조금 전에 다른 진술인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이후에, 아직까지 우리 정치는 2002년 선거에서 차떼기의 경험으로부터, 차떼기의 기억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의 정치자금 기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있어서 제가 드리고 싶은 타협점은, 물론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허용해야 된다고 하는 큰 원칙으로부터 약간 물러선 것인데요,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를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좀 타협점으로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대부분의 기업들, 우리나라 기업들이 비영리법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영리법인을 통해서 정치자금 기부를 기업 또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75페이지로 넘어가서 수요자의 측면에서 정치자금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후원회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원회를 지방의회의 의원, 지금 현재는 지방·광역 단체장까지만 허용되지요. 지방의회의 의원뿐만 아니라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까지 후원회의 지정권자로 확대해야 된다, 특히 도전자에게 후원회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출판기념회는 이후에 규제자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선관위가 정치자금 규제를 엄격하고 정확하고 투명하게 하는 한에 있어서는 출판기념회는 정치자금의 규제 안에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당의 후원회가 현재 금지되어 있는데요, 정당의 후원회 또한 허용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구당 부활인데요. 현재 지구당이…… 당협위원회가 범외조직인 관계로 선관위가 당협위원회,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구당에서 집행되는 정치자금에 관해서 조사하거나 규제할 수 있지 못합니다.

특히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당협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정치자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정치자금이 쓰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외조직인 관계로 선관위가 그곳의 정치자금을 규제할 수 없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편법·불법 정치자금을 양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정치자금을 규제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도 지구당을 법정조직으로 다시 부활해서 이 지구당에서 사용되고 있는 정치자금을 선관위가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제 측면에서 정치자금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략적인 요지는 현재 누더기가 되어 있는 선거법을 대폭 규제 완화를 해서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선거법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전혀 그 선관위의 선거법 개정안을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 개정안을 조속히 다루어 주셔서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보다 많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부여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이렇게 한편으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보해 주면서 선관위로 하여금은 정치자금을 보다 정확하고 투명하고 그리고 공정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자금 규제에 관해서 현재 고액 기부를 원래는 12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120만 원선으로 다시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선관위의 공개 범위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와 수입일자 그리고 기금액으로 정하고 있지만 실제 공개 내역을 보면 직업란에 회사원 이렇게 그냥 아주 추상적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쪼개기 후원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 범위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회사명까지 그리고 회사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까지 혹은 직장이 없는 주부의 경우에는 남편의 직업을 밝히는 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배분의 문제인데요. 조금 전에 강원택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현재 국고보조금의 배분 기준이 50%에 해당하는 것이 교섭단체에게 n분의 1로 배당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섭단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 운영에 관한 원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 정치자금의 배분 기준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섭단체제도는 국회에서 우리가 상임위나 본회의 이전에 교섭단체 간의 협의권을 두어서 의제 설정이나 의사일정을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국고보조금 배분에 적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조금 전에 강원택 진술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득표율과 의석률을 적절하게 섞어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진술인 여러분들의 발표를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진술인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시고, 질의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진술인을 정확하게 지명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대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동 위원** 울산 북구 출신 새누리당의 박대동 위원입니다.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자리를 함께해 주신 그리고 좋은 말씀을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대충 들으면서 느낀 점은 한 십여 년 전에 고비용·저효율 또 소위 돈선거로 비판되어진 과거 정치제도 내지는 선거제도와 관련되어서 개정된 정당법, 정치자금법이 현재 와서 돌아보면 나름대로 많은 환경 개선의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민주주의 활동의 영역을 좀 위축시킨 그런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폐지된 지구당제도는 다시 부활하면 좋겠다 하는 것과 또 정치자금은 현재 한도 1억 5000에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또 출판기념회의 경우에도 문제점을 보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는 선에서 하는 것이 좋지, 이 자체가 폐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체로 이렇게 의견들이 모아지시는 것 같습니다.

우선 임성학 진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방금 제가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말씀 중에 지구당제도 부활 그리고 단체와 법인의 정치자금 기탁 허용 방안까지도 말씀을 주셨는데 유권자들의 정치인에 대한 접근성, 민의의 수렴·전달 문제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좀 필요하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 지구당 시절에 그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부활할 경우에 그렇게 개선된다는 말은 반대론적으로……

그다음에 선거자금 한도를 1억 5000에서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했는데 윤석근 진술인께서 예를 들어 주신 2억 원 정도의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그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다른 견해가 계시는지,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이익을 후원회 수입이나 개인 기부 한도 내에서 기부하도록 변경한다면 하셨는데 횡수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선관위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 감시를

해야 되는데 그 한도를 넘는지를 파악하기도 매우 힘들지만 만약에 그 한도를 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를 좀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임성학** 첫 번째, 지금 새로운 지구당을 부활하게 되면 과거와 같은 돈 먹는 하마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요. 과거에는 회계 관리가 투명하지 못해서 그랬던 문제이지만 이제 과거와 전혀 다르게 지금 아주タイト하게 회계만 관리를 잘하면 그런 식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지금 기부금, 후원회 한도액을 1억 5000에서 2억으로 바꾼다고,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물가상승률을 어느 정도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지금 있는 선거제도에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선거제도가 좀 바뀌어서 선거 기간이 늘어나고 그렇게 된다면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만큼 선거운동을 더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선거운동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 따라 조금씩 더, 그것에 따라 좀 변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출판기념회 횡수는 사실상 지금 출판기념회 횡수가 좀 많은 것은 사실 불법·탈법 정치자금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이것이 현실적으로 원가에 책을 팔게 되고, 그 이익이 후원회로 들어가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여러 번 하실 의원님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책을 잘 쓰셔서 거기서 책이 많이 팔리도록 하고 그 이익이 들어간다면 그런 인센티브, 그러니까 좀 잘 못된 책을 만들어서라도 불법 자금을 받으려는 인센티브는 굉장히 줄 거라고 생각해서 꼭 횡수를 제한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익이 더 많이 나면 그다음 연도 후원회로 이월하면 되는데요. 이익이 넘어갈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대동 위원**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결례를 무릅쓰고 한 두세 분 진술인께 제가 질문을 먼저 던지고 답변을 좀 차례로 듣겠습니다.

강원택 진술인께……

지역정당의 필요성을, 다른 진술인도 마찬가지로 입니다마는 지역정당을 말씀하셨는데 지역정당을 만든다면 기준은 지금 현재 중앙당 중심으로 하

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어떤 식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윤석근 진술인께서는 일정 직급 이하 공무원에게도 정치 참여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 개인의 선택에 맡기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안 그래도 정치 불신과 함께 공무원 선거 개입에 대한, 공무원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 내지 감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이것은 예민한 사안인데 더더욱 부정청탁 방지법이 통과되어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좀 더 혼란스럽게 느껴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그리고 끝으로 박명호 진술인께, 지금 제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런 지적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나름대로의 타당성도 있다고는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 불신에 대한 일반적인 국민의 부정적 정서 내지는 그런 감정을 감안할 때 이러한 식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있을 수 있겠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을 했으면 좋겠는지를 각각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강원택** 지금 현재 정당법이 62년 당시 군정 시기에 만들어졌던 정당법보다 정당을 만들기가 더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당시에 5개 이상의 시·도에 있도록 했고 수도에다가 본부를 두도록 했는데 당시에는 전체 지역구의 3분의 1 그리고 20명 이상씩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2200명 정도의 당원이 있으면 당을 만들도록 했던 게 그 당시의 규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민주화가 됐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그때 쿠데타 난 이후에 만들어졌던 정당법보다 지금 현재 정당법이 정당을 만들기가 훨씬 더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출발점 자체가 시민사회에서 자유롭게 만들어져야 되는 결사체인 정당 자체에 법이 요구하는 기준이 너무 강하다 하는 게 일단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것을 대단히 완화시켰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하루아침에 하기가 정말 어렵다면 지금 있는 법규정을 그대로 둔 상황에서 ‘정당 설립과 관련된 규정은 지방선거에 한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그 규정만 하나 들어가게 되면 제 생각에는 지방선거에서 지방당이 나오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술인 윤석근** 공무원의 정치활동의 자유, 정당 당원으로의 가입 그리고 후원금 기부, 앞으로 먼 장래에는 일정 부분 허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기가 언제나 하면 공직사회가 더 투명해질 때까지. 그러면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개특위에서 그런 부분까지 함께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사적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혹은 후원금 기부를 하고 당원으로 가입하고 하는 활동을 할 때 그것이 공적인 영역에서 뚜렷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런 사적인 활동영역 부분들이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투영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 이 문제들은 유의해서 살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박명호**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구당 부활, 아마 대표적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 하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두 번에 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국민적 이해를 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고 생각이 되지만 음성적이었을 때 나타나고 있는 부작용들을 양성화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현실적 이해, 그다음에 좀 더 나아가서는 정치에 대한 규범적 이해를 우리가 모두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당, 의회는 원래 싸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항상 일사불란하고 군대식으로 운영되도록 하라는 조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게 당연한 곳에는 당연히 싸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다툼이 있어야 되는 곳에는 당연히 다툼이 있는 것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단선적인 방법으로 국민적 이해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와 더불어서 투명성이라고 하는 부분 또 관리와 규제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국민적 설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강원택 교수님, 지역당 설립 허용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지역대결을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비례대표제의 활용 이런 것으로 오히려 완화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당이라고 하는 허용이 주어지게 될 경우에 그러면 정치자금 어떻게 배분을 해 줘야 되는지 또 이게 대통령 중심제에

서 지역당 출현을 허용하는 것이 선거제도와 권력구조에서 내각제에 더 가까울 텐데 이런 부분하고 연관해서 어떻게 봅니까?

○**진술인 강원택** 지금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은 일단 지방자치 수준에서의 다당제 그러니까 지역 수준에서의 다당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우리가 중앙정치 수준에서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이렇게 다당제적인 형태로 보이지만 지역으로 가게 되면 사실상 1당 지배지요. 선택이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러니까 이런 1당 지배의 형태가 비민주적이지 않습니까? 이 1당 지배가 우리나라에서는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호남에서 새누리당이 대안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대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선택이 없는 구조로 계속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정치세력을 그 지역 내에서 한번 나올 수 있도록 만들게 해 주자, 그래서 예컨대 전라북도 그 지역 사회 내에서 열심히 활동을 했던 지역의 명망가들과 활동가들이 지방선거에서 일정한 정도의 당을 만들어서 나오게 되면 그러면 전북 지역에서 새누리당은 대안이 되지 않더라도 그 정당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새로운 대안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경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도 활성화될 수 있고 지방의 폐쇄적인 부분이나 혹은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계속적으로 예속되어 왔던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점들도 해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서부터 한번 뚫어 보자라는 게 제 생각이구요. 여기서부터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 이후에 법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병석**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백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재현 위원** 경기 광명갑 백재현 위원입니다.

우선 윤석근 선관위 실장님부터 말씀드릴게요.

정치자금법 31조, 32조가 항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소위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다' 하는 게 이 조문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이 조문을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31조, 32조 그 조문의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어떤 형태의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이런

형태가 구분이 명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검찰의 역할에 의해서 이것을 쪼개기로 보면 보이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현행 법조문은 문제가 있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지요?

(이병석 위원장, 정문헌 간사와 사회교대)

○**진술인 윤석근** 위원님, 단체와 관련하여 관련성 범위 이런 부분들은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도 실제로 이것이 단체에서 받은 돈인지 아니면 개인 돈인지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라든가 또 사적인 영역의 보수 성격의 돈인지 이런 부분들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제도를 한번 고민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모든 정치자금과 관련한 것은 선관위에 신고하게 돼 있잖아요, 투명하게. 그리고 그 관리감독을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진술인 윤석근** 예.

○**백재현 위원**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에 한해서는 선관위가 전속고발권을 가질 수 있도록, 선관위가 문제 있다고 고발하고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선관위에 보고된 자금에 대해서 선관위 이외에는 문제를 삼지 못하는 제도로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속고발권 자체를 선관위에 주는 것이지요.

○**진술인 윤석근** 위원님 말씀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 보고된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정치자금의 경우에는 적어도 깨끗하게 쓰겠다고, 또 받았다고 신고된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로써 종결을 하고 위법하다면 고발하도록 하도록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백재현 위원** 전속고발권을 선관위에만 주는 것에 대해서.

○**진술인 윤석근** 좋은 생각입니다. 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하시려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권한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백재현 위원** 당연하지요. 지금 공정경쟁과 관련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주는 것처럼 정치자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선관위에게 그 조사 권한도 강화시키고 거기에 대해 책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술인 윤석근** 예, 동의합니다.

○**백재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른 교수님들의 견 있으십니까? 지금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조성태 교수님은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진술인 조성태** 제 이름은 조성태고요.

제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되겠는데 조사 권한하고 수사 권한은 좀 다른 것 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정치자금법 관련 해서 선관위에게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은 저는 무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사는 할 수 있도록 하되 어디까지 조사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알 것 같은데요.

○**진술인 강원택** 제가 조금 한마디 말씀드려도……

○**백재현 위원** 예.

○**진술인 강원택**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마는 좀 크게 보자면 결국은 로비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청목회 사건이 났었을 때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가서 문제가 됐었는데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의 대형로펌의 경우에는 사실상 로비스트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 힘이 없는 약자들의 경우에는 청목회와 같은 형태로 국회의원들에 접촉을 해서 자기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싶은 생각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사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일정하게 투명성, 그러니까 쪼개기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권력과 돈의 맞교환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향적으로 폭넓은 차원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백재현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역정당과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즉 지역정당을 두었을 때 지금처럼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의가 더 갈 것이냐 덜 갈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거든요. 아까 강원택 교수님은 지방의회 선거를 놓고 본다면 이런 게 의미가 있다고 본 것이고, 그게 지역을 더 고착화시키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우려는 없는 것인지?

○**진술인 강원택** 이것은 약간 긴 전망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예컨대 새로운 형태의

대안정당이 여러 군데에 같이 생겨나게 되면, 예를 들면 환경운동을 하는 세력들이 각 지역별로 정당을 만들었다, 그래서 부산에도 비슷한 정당이 만들어지고 전북에도 생기고 전남에도 생기고 충청에도 생겼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런 아래쪽에서 만들어졌던 지역당을 기반으로 해서 이념적 정체성이나 혹은 정책적 지향성이 뚜렷한 정당이 전국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정당이, 지역 수준에서 어떤 새로운 대안세력이 생겨나는 것이 꼭 지역주의를 더 고착화시키는 그런 형태는 아닌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그다음에 지구당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 정치권에 대단히 이슈가 되어 있어요, 부활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옛날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고. 현실적으로 지금 정치를 하고자 하는, 새롭게 정치에 진입하고자 하는 분이나 현재 원외나 원내나 다 비슷합니다마는 당원 관리 자체를 도당에서 하다 보니까 많은 현실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또 그러다 보니까 현행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느냐 하는 의문도 다 갖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10년 전에 만들었던 이 법을 고칠 때는 나름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면 돈이 적게 드는 정치를 할 것이냐 하는 틀에서 만들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지구당 내에서 회의하는 것도 어렵게 되어 있는 법안의 내용이라든가 정치후원금을 걷을 수는 없지만 당원 관리를 충분히 하고 그 당비를 걷어서 지구당에서 활동하는 정도의 범위까지는 확대시키는 것에 대한 선관위의 입장은 어떤 것이고 강원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처럼 후원금을 받아서 지구당을 옛날 10년 전처럼 부활해서 높게 쓰자는 취지가 아니고 당원 관리를 지구당이 좀 더 타이트하게 하고 당비를 받아 가지고 지구당을 운영하는 형태로 가는 그런 정도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간 과정을 거쳐야 되는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진술인 윤석근** 제 생각뿐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도 회계책임자를 두자 그리고

당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당원 명부를 시·도당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당원 명부를 구·시·군 단위에서 관리하도록 하자 그리고 당비를 받아서 직접 회계책임자가 수입·지출하도록 하고 그것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후원회 제도를, 구·시·군당에 후원회를 둘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직은 구·시·군당 체제를 한번 운영해 보고 나서 그 사후에 판단을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백재현 위원** 원외나 원내나 똑같이 적용해야지 한쪽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같은 후원이라면? 원내를 한다면 원외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강원택 교수님은 거기에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술인 강원택** 예, 저도 비슷한 생각이구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협의회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들과 회의를 갖는 것도 현재의 법적인 구조로 보면 허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불편한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게 필요한데 다만 옛날 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구당이 위원장의 사유화된 조직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면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 사조직화되고 또 관련되어 있는 돈의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구당을 부활하되 어떤 독자적인 특성이나 혹은 당원들의 자율적이나 독립적인 참여를 어떤 형태로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구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형태로 지구당을 만들게 되면 투명한 어떤 자금을 의해서 그것이 운영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확연하게 제도적으로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비가 돼도 좋고 아니면 저는 그게 후원회가 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투명성만 보장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뒷받침이 되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백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출신의 경대수 위원입니다.

우선 조성대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지역정당을 허용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앞에서 다른 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도 ‘지역정당을 허용하면 지금의 지역주의를 조금 더 고착화시킬 우려가 없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선 지방선거부터 허용을 하고 나중에 확대해서 전국선거에도 참여하는 걸로 가는 게 어때냐’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에 지역정당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전국정당으로 전국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나 이런 데까지 참여할 수 있게 확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아주 지역주의가 더 극성을 부릴 염려가 없나요? 우려가 없습니까?

○**진술인 조성대** 글썬요, 그것은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경대수 위원** 아니, 점쟁이보다……

지금의 실태, 전국정당으로 가도 영남·호남, 지금은 충청까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 지역정당으로 허용을 해 가지고 지방의회를 장악한 다음에 이게 전국선거로도 진출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서 우리가 전국으로 발돋움하자 이렇게……

○**진술인 조성대** 현재 영호남 지역주의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술인들이 한결같이 말씀드리는데 지역정당에서의 지역은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도 우리는 진주에서의 진주당, 옥천당, 마포당, 이렇게 지역에서 유권자들이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스스로 결사체를 만들려고 하는 많은 움직임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의 정당법이 꼭 중앙당 소재지를 서울에 두어야 되고 그리고 5개 시도 이상, 각 시도에 1000명 이상의 당원들을 뒤야지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옥천당이니 마포당이니 혹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풀뿌리 정당들을 조직하려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런 움직임

들이 정치적인 결사의 자유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 현재의 문제이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문제를……

○**경대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작용이 없겠나 그 말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지요.

○**진술인 조성대** 예. 그렇게 지역으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험할 수 있는 기제들을 허용해 준다면 오히려 미래가치로 본다면 지역주의는 훨씬 더 완화될 거다, 우리가 흔히 두려워하는 영호남 지역주의는 훨씬 더 완화될 거라고 봅니다.

○**경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7분밖에 시간이 없어서 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후원금 부분에 관해서 후원자의 인적사항, 배우자의 직업이라 그럴까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다 밝혀서 후원금 내역의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걸 확보하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윤석근 실장께서 발표하실 때 ‘이 후원금 규모가 그동안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도 감안이 안 돼 있으니 연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 정도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 말하자면 후원금 증액이라든지 내는 사람들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시면서 그런 의견을 내시는 겁니까?

○**진술인 조성대** 예,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면 후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후원을 하고 싶어도, 말하자면 내 개인적인 신상이 다 노출이 되는 상황으로 가면 후원이 될까요?

○**진술인 조성대** 저희가 후원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자라고 하는 것은 고액기부자에 한해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기부 명단이 공개되는 게 300만 원 이상인데요. 이것은 사실 세계적으로 어떤 나라도 이 정도까지 고액을 기부해야지만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따라서 명단이 공개되는 고액기부의 기준을 이렇게 낮추자고 하는 것이고요.

○**경대수 위원** 알겠습니다.

강원택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신 의견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하나 궁금해서……

윤석근 실장이 발표한 내용 중에 공무원 정당 가입 허용 문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국가정책 수립이나 집행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또 당파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방지하고 편향적인 공무집행의 이와 같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 이런 과거의 결정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직급 아래에서는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위랄까 정당가입을 허용하자, 이게 윤석근 실장의 발표 내용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교수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진술인 강원택** 저도 기본적으로는 비슷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의 참여 금지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2년 정당법부터 규정이 되기 시작을 한 건데요.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공무원이 지금 규제를 받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와 한두 나라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정한 직급 아래에서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를 개방하는 문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대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을 법제화하는 것은 반대하신다 그러면서 ‘원하는 정당만 실시하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것은 교수님 견해가 틀렸다는 의견이 아니고 이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은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주장인데요. 저희 당만이 할 경우에 역선택 방지라든지 이와 같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시행할 경우에 부작용을 극복하는 방안에 관해서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진술인 강원택** 역시 지금 제일 사실은 제가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참여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컨대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이라든지 구의회의원이라든지 혹은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자신의 생활과 직접 연관이 있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에서도 30%, 40%, 그것도 공휴일인데 이런 정도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인지도가 떨어지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각 정당의 후보를 뽑는 행사에 과연 몇 명이나 갈까가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라서, 결국 새누리당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얼마나 참여를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역시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 전남 나주·화순 출신 신정훈 위원입니다.

정개특위 활동 과정에 두 가지 과제라고 하면 국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하고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나온 이야기는 승자독식·일당독점의 정치현실을 좀 바꿔 보자 하는 제도적 대안들이 많이 나왔었고, 지난번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여야가 초청한 진술인 모두가 그런 지역주의 정치 또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선거제도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서 권역별 비례대표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위기였어요.

오늘은 또 여야·진술인을 망라하고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해서 국민들의 정치 참여를 좀 더 활성화해 보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대체로 선관위 실장님을 제외하고는 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하셨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정당의 설립 요건 완화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의 정치활동을 활성화하고 또 지역주의 정치를 완화하고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여쭙고 보려고 그러합니다.

저는 이것을 로컬파티(지역정당) 허용이나 마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것은 아주 일면만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당이 5개 시도당에 1000명 이상 그리고 서울에 소재지를 둔 이런 건 과도하다는 거지요. 과도한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해서 소수정파 또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세력이 필요하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당 설립을 완화하자 이런 뜻으로 보여지고 그 형태가 때로는 지방자치 공간에서 활성화해야 되는 그런 자치정당일 수도 있고 또 한 지역을 무대로 한 로컬파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나치게 지역정당, 지역주의 정당 이렇게 협소하게 보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외국의 경우, 일본이나 독일 많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혹시 독일…… 일본의 로컬파티, 감

세일본이나 오사카유신회 이런 등등이 있는데 그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이 지역패권 내지는 지역주의 정당인지 아니면 그 지역의 주된 과제, 그 지역 주민들의 아주 중대 관심사를 풀어내는 정당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경험 있는 교수님들이 그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성대 교수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진술인 조성대 기본적으로 지금 신정훈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로컬파티는 싱글 이슈 파티(single issue party)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지역의 어떤 현안을 가지고 지방자치도를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정당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풀뿌리 조직으로 성공한 케이스는 유럽의 녹색당이 대표적인 케이스인 것 같고요. 최근에는 또 해적당 같은 경우에도 카피레프트 운동을 하나의 쟁점으로 해서 지금 유럽 의회에 진출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일본의 유신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역의 현안을 가지고 접근하는 지역정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정훈 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정당 설립요건 완화를 통해서 탄생한 지역 기반 정당이 민주당·광주당·전주당 이런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극히 이례적인 것이고 대체로 그런 지역 주민들의 관심사, 결국은 정책 이런 걸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지요?

○진술인 조성대 예.

○신정훈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호남 쪽에서 농민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농민당, 호남을 기반으로 하지만 정확하게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지향하는 전국정당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특히 현실은 보면 더 참담합니다. 현실을 제가 보니까 지금 광역의회만, 지방자치를 국한해서 보면 새누리당이 민선 6기, 2014년도 영남 선거에서 173석 중에 164석, 95%를 차지했어요. 호남은 새정치연합이 105석 수 중에서 99석을 차지했어요. 민선 5기, 민선 4기 다 비슷합니다. 90% 이상 독점하는 이 정당의 정치문화, 이 지역주의 정치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또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윤석근 실장님께서서는 오히려 지역주의를 강화할 거다……

그러면 현재 있는 이 지역주의적인 정치, 호남에서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로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장 다 독식하는 이 정치를 완화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에 권역별 비례대표도 있습니까라는 현재 우리 여야 의견을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굉장히 서로 좀 유보적이에요.

만약에 이 권역별 비례대표도 허용이 안 되고 또 하나 정당의 득권만 강화되는 지구당 설립만 완화된다면 이 양대 정당, 2개 정당의 지역독점 구도는 훨씬 더 강화될 거다, 그런데 이런 정당 설립의 요건을 완화해서 다양한 정당이 활성화되는 것이 어떻게 지역주의를 강화할 거다라고 보시는지?

또 하나는 지금 선관위에서 제시한 29페이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정당의 평균 수명이 3년 이하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윤석근 실장께서 제시한, 이 이야기를 자료를 제시하면서도 윤석근 실장께서는 현재 정당 설립 요건이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 저는 이 자료만 보더라도 과도한 제한이기 때문에 정당이 설립해 가지고 버티다 버티다 2, 3년 내에 다 소멸하는 그런 정당으로 간단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지역주의 정당이 아니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당 설립 요건의 완화가 필요하다……

그것의 내용으로서 지금 선관위가 선거법 개정, 정당법 개정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핵심이 지역주의 완화이고 정치활동의 활성화이고, 이런다고 보면 정당 설립요건을 권역별 비례대표 그리고 지구당 설립과 병행해서 완화해야만이 그 모든 목적이 활성화될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윤석근 실장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윤석근 정당 설립 요건을 완화하자 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동의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제가 자료에서 밝힌 것은 정당의 평균 수명이 2년 조금 이상이더라, 그래서 정당을 설립하기가 지금 현재 정당법이 그렇게 까다로운 것은 아니구나 하는 자료를 공개한 거고. 그리고 1년에 보니까 118개 폐지되고 하는 그것은 선거에 참여하지 않거나 2%

미만 얻었을 때 폐지되는, 그런 경우에 의해서 폐지되는 정당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정당 이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 우려, 이 부분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신정훈 위원** 30초만 더……

○**위원장대리 정문헌** 예.

○**신정훈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설립된 정당이 3년 이내에 다 소멸되는 그런 상황은 설립 과정에서 무리한 정당…… 현재 조건을 맞추기, 정당 설립 요건을 맞추기 대단히 어려운 요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좀 완화하면 5년짜리, 10년짜리 정당들이 많이 생길 거다, 이렇게 역으로 보시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윤석근** 알겠습니다.

○**신정훈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 위원** 김상훈 위원입니다.

국민들께서 아직 또 당분간 정치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곱지 않기 때문에 후원금의 모금 한도 확대라든지 등등의 규제 완화성의 관련 법 개정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출판기념회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의 통로로 지금 많이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입·지출의 투명성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또 아니면 출판기념회 자체를 조금 제한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윤석근 선거정책실장님, 쪼개기 후원의 정의가 정확하게 뭐지요?

○**진술인 윤석근** 원래의 후원자가 후원금을 후원하고자 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거나 또는 부담스러울 때 여러 사람의 명의로 나누어서 하는 것을 이른바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쪼개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특정 조직의 장 또는 기업의 대표가 해당 조직의 소속원에게 ‘소액기부 10만 원은 연말소득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어떤 지역의 발전 등등을 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의원에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후원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행 정치자금법 위반인가요?

○**진술인 윤석근** 어떤 자리에서 어떤 톤으로 했는지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법에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 금지됩니다. 그런데 기부를 권유하는 정도의 선에서 그쳤다면 위법은 아니라고 봐집니다.

○**김상훈 위원** 그런 경우에도 아마 현재는 해석상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마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정치자금을 거두게 했다는 정도의 오해를 살 수도 있겠지요.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진술인 윤석근** 예,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그런 발언을 한 자리가 직무상의 행위를 하는 자리였다면 지시나 강요로 들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김상훈 위원** 그래서 이런 데 대한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설정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다음에 강원택 교수님, 발표 원고에는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은 안 하신 것 같아요.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원고에 실어 놓으셨던데,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당론 채택을 해 놓은 입장입니다마는 반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정치 신인에게 좀 불리하다 이런 취지 이신가요?

○**진술인 강원택**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현실적인 대안, 아까 말씀드렸습시다마는 결국은 자발적 참여가 전제가 되어야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당 행사에 혹은 지방선거 같은 그런 선거조차도 참여율이 낮았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후보자들 사이에 동원의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방식과 과연 뭐가 다르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실 김무성 당대표께서 학교에 오셔서 특강하시면서도 오픈 프라이머리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 문제점들을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계시는데 저는 역시 공

감할 수 없는 부분들은,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현직자들에게 대단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입니다는마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의 교체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그동안은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건 굉장히 이상하지만 그게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많이 교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동안은 교체율이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만약에 오픈 프라이머리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된다면 사실은 지금 현재의 체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뜻은 반영하기 굉장히 어려운 형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김상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도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차기 총선에서 출마의 뜻을 갖고 있는 분들께서 특히 신인인 경우에는 일찍 그 지역에 좀 이름을 알리고 자기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신념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일찍 부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번 정개특위를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선거와 관련된 대강의 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그 시점이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술인 강원택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평소에 너무나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쟁자의 경우에는 지금 지구당이 없는 상황에서 더더욱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충족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규제 일변도인 선거법이 거의 과감하게 철폐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많은 진술인들이 이야기했던 지구당 부활도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훈 위원 박명호 교수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지구당의 설립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뉘앙스의 진술을 해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진술인 박명호 예, 맞습니다.

○김상훈 위원 현재 지구당 설립을 하게 될 경우에 현역 당협위원장, 또는 비현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아마 발표 원고에는, 강원택 교수님 원고에는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진술인 박명호 현재 당협 체제에서는 사실상 국회의원들과 비현역 원외위원장의 경우에는 불공정한 경기가 되고 있는 거지요.

따라서 이 부분이 지구당이 부활이 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상훈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근 실장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진술인 윤석근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회 균등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현역은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사무실에서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데 비현역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둘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 이야기는 여러 가지 접촉에 장애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 하는 말씀입니다.

○김상훈 위원 2004년도 지구당 폐지를 했던 그 법 개정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 변화가 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좀 건설적인, 정치적인, 아니면 지역 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소통의 공식적인 채널을 만들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구당 설립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문헌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태 위원 오늘 진술인들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당 추천이나 야당 추천이나 그렇게 큰 견해차가 없어서 꽤 반갑네요. 선거제도에서도 그런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어떤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평소에 늘 이 정당법·정치자금법 가지고 여러 기회에 얘기하던 걸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선 2004년도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였다 그래서 지구당을 폐지해 가지고 17대 총선이 깨끗하게 치러졌다 이게 보통 정설로 되어 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보시는 분마다 시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정문헌 간사, 이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가령 다른 일이 없었다면 그때처럼 돈 쓰는 거였으면 지구당 없어졌어도, 지금 당원협의회라는 건 사실 지구당하고 똑같아요. 윤석근 실장님도 조금 전에, 원외위원장들도 사무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당협사무실, 어떤 형태로든지. 지방의원 합동사무소…… 저도 원외 생활하면서 다 사무실이 있었지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구당이 없어져서 돈을 못 쓴 게 아니라 우선 50배, 17대 총선을 앞두고 50배가 생겨 가지고 그때 1월 달인가, 그리고 문제는 검찰의 의지가 중요해요. 지금 법을 아무리 이상적으로 만들어 놔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실질적으로 수사권이나 이게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데 검찰이 얼마나 중립적·독립적으로 수사할 의지를 갖고 돈 쓰는 사람 다 잡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해방 이래 지금까지 돈 써도 된다는 선거법이나 뭘 가진 적이 없잖아요. 돈은 그동안 다 불법이었어요, 항상 돈 쓰는 거는. 그런데 다 써도 아무 일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17대 총선을 앞두고……

○위원장 이병석 유인태 위원님, 마이크를 앞으로 좀 해 주세요.

○유인태 위원 왜 잘 안 들려요?

○위원장 이병석 마이크를 뒤로 놔 놓고 하니까……

○유인태 위원 그래서 그때 이런 일도 있었어요. 우리 당 쪽의 어느 중진 의원이 산악회를 버스 몇십 대를 가지고 놀러갔는데 MBC 기자가 들어가서 그 돈 쓰고 하는 걸 찍어 가지고 그 양반 정계 은퇴를, 부의장도 지내시고 한 분인데 있었고 그것도 또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에 나오려고 하는 후보가 어디 가서 10만 원 준 거를 선거관리위원회 들고 가 가지고 50배, 500만 원 포상금 받고 그분이 불출마를 하고 하면서 선거가 깨끗해진 거지 지구당이 폐지되고 뭐 그 당시 2004년도 그렇게 엄청나게 했다는 건 전혀…… 우선 팩트들을, 특히 정치학자들은 좀 똑바로 제대로 아시고 앞으로 어디 가서 임하실 필요가 있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거는 이 제도하고 법하고 현실하고의 괴리입니다.

아무도 안 지키는 법을 우리가 각 정치 관련법에 정치자금법이나 가지고 있는 게 참 많은데 우

선 아까 말씀드린 당협위원회 사무실, 거기 회의 하면 안 돼요. 현역 의원은 그게 국회의원 후원회 사무실을 지역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국회의원 사무실이 아니고 원외.

그다음에 원외위원장은 사무실 못 가지고 있게 되어 있는데 무슨 명목을 띄워서든지 지방의원 합동사무소든지 다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당협과 관련된 회의를 하면 걸려요. 이 자리에다 그것 때문에 벌금 문 사람도 있어요, 여기에. 누구라고 이름은 안달 텐데……

그러니까 다하고 있어요, 전국에서. 거기서 하지 그러면 거기 모였다가 나가서 하거나 커피숍 가서 회의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법을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붙었다 떨어졌다 많이 해 봐서 원외 생활을 해 가지고 4년 있다가 오면 그동안에 부부가 별 수입이 없었으면 4년 먹고 살고 사무실 유지하고 했으면 재산이 많이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최소한 몇백을 썼다고 쳐 보세요. 한 2억 얼마는 줄어야 될 거 아니야? 저 18대 떨어지고 19대에 왔는데 재산 안 줄었는데 아무도 저를 조사를 안 해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지구당 부활하고 그분들에게도, 그 사람들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정치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원외 위원장들도. 그분들한테도 후원금 받아 가지고 떼떼하게 하게 해 주는 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다 받아서 하는데……

그런데 지금 원외위원장은 부모로부터 상속받거나 증여세 내고 증여받은 거 외엔 누구한테 10원 한 장, 외국인한테 받아도 안 돼요. 그런데 떨어지면 외국 가서 전 세계 돌아다니고 책 쓰고 해도 조사도 안 해요. 뭐 누구라고 또 제가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괴리를 없애고 하는 게 사실은 이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에서 전 알파요 오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경조사 일체 못하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령 제 지역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상대는 다 하면 안 하면 나만 바보 돼요. 그런데 그거 단속을 안 합니다, 아무도.

내가 선관위 관계자한테도 행자위할 때2 이걸 못 하게 하려면 제대로 다 못 하게 하든가, 남들은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사람만 바보, 지금도 그 제도도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문제가 우리가 정당법·정치자금법을 접근할 때 핵심으로 삼아야 될 것, 모두가 지키는 법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어떤 사람 지키고 그런데 안 지키는 사람도 아무런 불이익을 안 받는 법은 이걸 법이 아니라고 전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어쨌든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마는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의견이 비슷하신 거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진술인 있음)

그런데 그거 2006년인가, 우리당 쪽에 이강래 위원장이 정치개혁특위이고 여야 간에 당시에 이게 합의를 한 번 봤었어요, 이렇게 고치려고. 했더니 한겨레신문이 어떻게 미리 알아 가지고 개혁 후퇴라고 한 방 굶으니까 그게 무산된 일이 있는데 지금도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지구당 부활이니 안을 내놓으니까 ‘돈 먹는 하마가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냐’ 이런 기사도 나왔고 그 법을 주도했던 사람 또 인터뷰를 해 가지고 ‘정치가 지금 개관으로 가는 것처럼 개관 만든 자가……’ 하여간 그런 소리 하는 게 나왔는데 그래도 오늘 이렇게 진술하러 나오신 분들이 그런, 용감하게 다들 전향적인 의견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유인태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김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희선 위원 진술인들 오늘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서울 서초갑의 새누리당 김희선 위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유인태 위원님께서 우리 정치의 현실, 이런 아주 실증적인 얘기도 해 주시고 또 교수님들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또 조금 다른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정치 경험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진술인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과연 이게 저도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보면 외국의 법제도·정치제도도 마찬가지로 보는데요. 아주 이상적인 내용을 우리도 반영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면서도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의 정치자금법이라든지 정당법 이런 것은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또 우리 국민들의 정치의식 또 수준 이런 게 다 복합되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04년도 정치개혁 이후에 지금 10년이 흘렀는데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우리 국민

들이 정치권에 갖고 있는 신뢰도, 그런 거를 고려할 때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가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윤석근 실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의 정당 가입 문제도 그래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정당 가입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 정치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과잉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극심하거든요. 나라가 반으로 갈려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공무원들의 정당 가입을 허용했을 때 그것이 미칠 파급효과는 굉장히 크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렇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들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이병석 위원장, 김태년 간사와 사회교대)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윤석근 실장님한테 제가 묻겠는데요. 저는 지난번 중앙선관위에서 출판기념회에 대해서 안을 냈는데 결국은 출판기념회는 허용하되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그냥 원가만 받고 이렇게 하는 내용을 발표를 한 거지요?

○진술인 윤석근 예.

○김희선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다른 교수님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박명호 교수님 임성학 교수님의 내용이 저랑 생각이 좀 같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중앙선관위에서 그때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어땠을까? 우리 지금 개인 국회의원 1인당 정치후원금 한도가 1억 5000이지 않습니까, 통상?

그 1억 5000 범위 내에 그것을 집어넣는 것이지요. 집어넣고 예를 들어서 직접 돈으로 받든 통장으로 받든 출판기념회로 받든 1억 5000 범위 내에서 해라, 또 선거가 있는 해는 3억 범위 내에서 출판기념회를 해라.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후원금 외에 음성적인, 그러니까 선관위 통제를 안 받는 창구로서 출판기념회가 악용되는 것은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출판기념회, 이것은 저희 새누리당 안하고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새누리당은 아예 출판기념회를 하지 말자는 혁신안을 내셨습니까마는 그 범위 내에서 하자는 것

이지요. 그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카드 결제해라 뭐 해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1억 5000 범위 내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출판기념회는 허용하되 지금 개개의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한도 내에서 해라 이렇게 하면, 그리고 신고받고 어디 사용하는지 선관위가 다 통제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혹시 책값 말고 음성적으로 받으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른 정치자금도 마찬가지로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가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왜 중앙선관위에서 그런 안을 안 냈는지 저는 그것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안은 1억 5000 후원금 외에 원가든 뭐든 해서 다시 또 다른 수입을 받게 하는 안이란 말이에요. 왜 그런 안을 하셨는지, 제 안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좀……

○진술인 윤석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정당 가입 문제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정당 가입 문제는 그리고 후원금 기부 허용 문제는 공직사회가 투명해 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헌법재판소 판례 나온 것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할 수 없다.” 이 조문이 헌법불합치 받았습시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무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이 경우에 한정해라 하는 뜻입니다. 사적인 영역에서 퇴근 후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용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선거법이 개정되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전반적으로 허용하자라는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출판기념회를 정치자금제도의 틀에 넣어서 회계보고 하면 될 것을 왜 전향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하십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다만 출판기념회를 할 때 모금함을 두게 되고 그 모금함에 후원하

시는 분들이 봉투를 함에 넣으면 그 봉투를 나중에 가지고 가서 회계 계리를 하고 장부 기장을 하고 회계보고를 할 텐데, 그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면, 이 신고를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 적법합니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해 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국민들이 그것을 신뢰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지키고 있어야 되고 또 그렇지 않다면 현장에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해야 됩니다. 줄을 세워서 봉투에 바로 넣게 하지 말고 거기서 봉투를 열어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절차가 너무나 번거롭고 번잡하다, 과연 이것을 정치권이 수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자금으로 봐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저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희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김희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식 위원 김기식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교수님들께서도 간단히 대답……

강원택 교수님, 지역정당 허용에 대해서는, 저는 정당 결사의 자유는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정당 결사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애야 된다는 점에 찬성하는데 지금은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전국 투표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정당을 허용할 경우에 지역정당은 정당 국고보조금에서 그냥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십니까?

○진술인 강원택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거기까지 제가 검토하지는 못 했고요, 일단 지방선거에서라도 물꼬를 트자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 때문에……

○김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쨌든 헌법상 정당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고 정당 국고보조금제도가 있어서 강원택 교수님이나 다른 교수님들

께서도 지역정당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정당 설립요건을 완화했을 때 국고보조금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후에라도 추가적인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 고요.

박명호 교수님, 지구당 부활은 제가 2004년도 에 그 당시 참여연대 사무처장으로서 국회 범국 민정치개혁협의회 정치 개혁을 할 때 사실은 시 민단체에 있었던 제가 지구당 폐지에 대해서 오 히려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정치에 토대가 우리나라는 약한 데 지구당을 부활했을 때 정당의 시민사회적 토 대가 오히려 약화된다는 이런 것이었는데, 다만 지 구당 부활은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중 앙정당에서도 정당의 민주화가 얘기됩니다마는 그래도 중앙당은 당 대표의 권한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총회라든가 여러 가지 견제 장치에 있는 반면에 지구당의 경우에는 완전히 지구당 위원장의 사당화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공동대표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지금 정당체제상 오히려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렇 다면 지구당 위원장과 소위, 그러니까 기업에서 CEO와 이사회 의 의장이나 이사회를 분리하는 것처럼 지구당 차원의 거버넌스, 지배구조와 관 련된 개혁방안을 혹시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진술인 박명호 말씀하신 것처럼 과도화·사 당화는 들어가는 돈과 관련해서 불가피합니다. 특히 우리 문화와 관행상 한 조직에서 과연 여 러 명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제시된 것처럼 민주 적 거버넌스의 전제조건은 사실 제도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높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 니다.

이를 테면 지금 지구당의 경우에는 당원명부 를 누가 갖느냐라고 하는 게 핵심적인 사안일 수 있는데 이것을 중앙당에서 상근직원이 파견 돼서, 상근직원은 그야말로 직원이기 때문에 돌 아가면서 근무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제 도적인 부분을 좀 확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인데 근본적으로 보면 문화와 관행이라고 하는 우리의 특수한 현실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씩 더, 특히 자금 관리와 투명성이 제고되면서 조금 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바로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성대 교수님, 지금 지구당 거버넌스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정당에 대한 법적인 제한은 최소 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지구당을 부활할 경우에 사당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당에 한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구당 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분리한다든가 이 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지 의견을 좀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정당후원회를 허용하자 이런 의견 을 주셨는데요, 정당후원회는 법인단체의 기부 허용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그것은 같이 쌍으로 처리했던 것이지 개인보고 정당후 원회에 기부하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인 단체의 기부는 기업을 규제하다 보니까 단체로 서 노동조합도 같이 규제하면서 생겨난 문제이 고요, 한쪽만 규제하기 어렵다, 법인이라고 하는 것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애매해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협회 이게 영리법 인이나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돼 있습 니다.

그런 점에서 소위 이권이 개입할 수 있는 부 분이 여전히 있고 그럴 경우에 기업자금의 정치 유입을 통해서 정경유착이 강화되고 현실적으로 솔직히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에는 기업의 후원금 이 많이 몰리고 나머지 정당들에는 법인의 후원금 이 없는 정치자금의 편중성이 있어서 지금 문 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당의 후원회라고 하는 것이 원 칙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한국적 현실에서 이 게 가능하나, 부작용이 더 큰 것 아니냐라고 하 는 두 가지, 지구당 문제하고 정당후원회에 대해 서 의견을 좀 주시지요.

○진술인 조성대 지구당 문제는 적절하게 위원 장과 운영위원장을 분리해서, 그런 생각도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당후원회와 관련해서 사실 보수 정당이 후원금 많이 걷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 의 사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당후원회를 허용하자라고 하는 것은 단체가 중앙당에게 일정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

는 자유를 부여하자라는 선상에서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금액의 불평등함 혹은 불균형성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일정하게 정치자금의 기부 자유는 허용하되 이퀄 보이스(equal voice)를 위해서 기부금의 상한선은 적절하게 사회적인 합의를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기식 위원 그래서 지금 진술인들께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지구당의 거버넌스 문제나 정당후원회를 허용했을 때 특히 우리 한국적인 현실에서 그냥 무한정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것이 어떤 경로, 예를 들어서 선관위를 통해서만 한다든지 했을 때 지정할 경우에 전액을 주지 않고 형평성상으로 보면 일정 퍼센티지는 지정할 데 주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분배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정당후원회의 운영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의견들이 계시면 다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윤석근 실장님께, 저희가 2004년도에 정치자금 개혁할 때요, 취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소액화하고 투명화하되 이렇게 소액화해서 투명할 경우에는 대가성에 대해서 불문한다.

정치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포괄적 대가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2004년도에 설계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다못해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이 나라를 위해서 더 잘해 주기를,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자기 돈을 내더라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입법 해 주기를 바라면서 후원금을 내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정치자금은 모든 경우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 대가성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되 소액으로 하고 투명하게 함으로써 폐해를 막겠다, 이런 취지였던 것이지요. 그렇지요?

○진술인 윤석근 예.

○김기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놓고 보면 적어도 합법적인 정치후원금,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 돈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해야 되는 게 입법 취지상 맞는 것 아닌가요?

○진술인 윤석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기식 위원 그런데 최근에 와서 검찰에서 그것을 대가성 문제로 수사한다, 이것은 2004년

도 법 개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윤석근 그것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판례냐 그러면 2004년도 이후에 나타난 판례인데 당비를 공천과 관련해서 특별당비를 냈습니다. 공천과 관련돼 있는 것을 검찰에서 입증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를 받았습니다. 회계보고에 드러난 특별당비였습니다. 공천헌금과 관련이 있다, 공천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역시 대가성의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은, 특히 그런 경우에는 고액에서 이루어집니다.

○김기식 위원 그 케이스는요 적절하지 않은 게 특별당비는 금액, 정치자금법상 이것은 1인당 금액 제한이 있잖아요?

○진술인 윤석근 예.

○김기식 위원 500만 원 제한이 있고 연간 2000만 원 제한이 있고 500만 원 냈을 때는 다 공개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100만 원 이상은 다…… 특별당비는 그것보다 훨씬 더 고액을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진술인 윤석근 예.

○김기식 위원 몇 억을 특별당비로 내서 대가로, 예를 들면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경우는 당연히 형사 처벌해야지요. 이것은 2004년도 개혁에서 허용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판례라고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합법적으로 공개된 후원회 계좌를 통해서 들어온 돈의 대가성 문제를 논한다는 것은 정치자금제도 자체의 근본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해 조합비를 조합원 개개인들이, 단체장도 아니고 조합비도 아니고 개개인들이 그냥 우리 노동조합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 달라고, 우리 노동자를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해 달라고 후원한 것에 대해 형사 처벌한다는 것은 세계 정치사적으로 보면 코미디지요.

그리고 2004년도 법 개정을 할 때 그에 대해서는 입법 목적을 분명히 해 줬던 것 아닙니까? 대신에 소액으로 투명하게 들어오지 않은 모든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하겠다,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로 2004년도 법 개정을 한 것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술인 윤석근 예, 위원님 말씀이, 소액다수 기부제도를 정착시켜 가면서 대가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자라는 방향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500만 원까지 후원금 허용 한도가 돼 있습니다, 300만 원 이상은 공개되고. 과연 그런 금액까지도 대가성을 배제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은 지금……

○김기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는 2004년도 법 개정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조문의 애매함이 있다면 정비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진술인 윤석근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윤석근 실장님!

○진술인 윤석근 예.

○위원장대리 김태년 방금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사이의 정치자금은 대가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 지금 이 취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진술인 윤석근 아닙니다. 지금 법이 명확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대가성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말자라고 진술서에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보고 들어오는 적법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따지지 말자. 적어도 입법 활동을 위해서 국회의원에게 지원해 주는 자금의 여부에 대해서는, 성격 여부에 대해서는 따지지 말자 하는 취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그러니까 방금 김기식 위원님의 질의와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신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진술인 윤석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김기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김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위원 경기도 부천 소사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소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술인 다섯 분들의 진술내용을 보니까 오늘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지구당 부활과 정치자금 기부 확대를 통한 정당정치의 활성화 이 부분에서 크게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히 다섯 분의 진술인들께서 함께 공감해 주신, 함께 의견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치권의, 각 정당의 당리당략을 떠나서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서는 2004년도에 지구당이 ‘돈 먹는 하마’라고 하는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라졌는데 이번에 다시 부활돼서 정당정치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분 모두 다 찬성하시는 거지요? 반대하시는 분 없으시지요?

(고개를 끄덕이는 진술인 있음)

그리고 정당 설립요건, 지역정당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정당 설립요건을 약화시키면, 지금 이 부분을 누구나 쉽게 정당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 지역정당을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강원택 교수님께서서는 지금 현재의 지역정치 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방선거에서라도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정당 설립요건을, 창당 설립요건을 좀 완화하면 이것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역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강원택 교수님?

○진술인 강원택 저는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현실적으로 지금 2개의 정당이 갖고 있는 장악력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정당이 출현해서 현행 선거제도하에서 돌파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당은 만들 수 있지만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 정당이 과연 몇 개나 나올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김상희 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의 이런 기형적인 지역정치 구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을 한정하는 이런 지역정당의 설립으로 돌파하기보다는, 그것도 또 지방선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그것보다는 아까 발표에도 말씀하셨던데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든가 선거제도의 기본을 바꿔서 해야지 이런 지방선거에 한해서 지역정당을 만들어서 돌파한다 하면 저는 오히려 정치가 아주 기형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영호남에 그야말로 특정 정당의 패권이 관철되고 있는데, 사실은 영남이나 호남에도 현재의 경우에 진보적 정당이나 또 소수

정당들이 있습니다. 그런 정당 내지는 무소속 이런 부분도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높은 비율로 당선되기도 하는데 여기에다가 지역에 말하자면 광역 단위로 해서 전남만, 전북만, 광주만을 활동지역으로 하는 지역당을 만들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권 더 왜곡시킬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일반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이런 폐쇄성이나 지역 중심적인 갈등구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역작용이 크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역구도의 돌파는 정식으로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원택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진술인 강원택 예,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는 일단 이번 정치개혁특위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적 개선책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고……

○김상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강원택 지금 현재 비례대표의원 숫자로는 충분한 비례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의 지역구 의원을 줄일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남은 방법은 의원정수를 늘려서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저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희 위원 예, 저도 교수님하고 같은 생각이구요.

제 판단에는 지금 지역구 수를 더 줄이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지역구 수는 그대로 고정을 하고 그리고 비례대표 수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전체 의원정수를, 약간은 늘어나겠지요. 그 부분을 국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지금 이런 지역 구도를 완화하는 노력을 해야 되고,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지금 지방선거는 비례대표가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높이고 또 지역 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픈 프라이머리와 관련해서도 의견들을 주셨는데 윤석근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는 선악이나 뭐라 그럴까?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문제고 각 정당에서 정당의 사정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

정당에 강제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그렇지요?

○진술인 윤석근 예.

○김상희 위원 그래서 각 정당이 알아서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데, 각 정당이 알아서 하는 새로운 공천방식이거든요. 이것을 국가가 지원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관위 법안을 보면 국가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국가 지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정당에 대해서 지금 국고보조금을 주고 정당활동을 지원해 주는 것은 정당의 가장 중요한 활동인, 의무이자 책임인 공직자 추천 이 부분을 정당활동을 통해서 잘하라는 건데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상당한 국고보조를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윤석근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이유는 정당에서 자율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선 선거인명부를 만들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거인명부를 우리 선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상희 위원 명부 지원만 하는 겁니까? 비용 관련해서 지원이 일부 들어가지 않습니까?

○진술인 윤석근 명부 지원을 하면서 투표 개표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합니다. 그 비용은 국가에서 부담을 하겠다는 것인데 투표 개표를 지원할 때 정당에서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것도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상희 위원 제가 죄송하지만 추가질의 안 하고 한 가지만 질문을, 아무도 안 하셨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김태년 하십시오. 그런데 원래 추가질의 없어요.

○김상희 위원 아무도 질의를 안 하셔서요. 그리고 우리 진술인들께서도 관심이 없으셔서 가지고 아무도 안 하셨어요. 여성 진출 확대와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 지역구에 여성 비율이 아마 진술인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8%입니다. 전체의 8%만이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특정 성의 대표성이 심각하게 낮아져 있는 이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법

에도 30% 여성을 추천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저희 당도 그렇고 여성 30% 지역구 공천을 의무화하는 것을 개혁안으로 내고 그리고 새누리당의 경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선거보조금을 감액, 말하자면 페널티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여성 30% 공천을 확보하는 이행수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법안을 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선거보조금과 그리고 여성추천보조금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보조금에 대해서 페널티를 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진술인들께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어떻게 하면 여성 30%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강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강원택 제가 딸이 둘이라서..... 저는 기본적으로 원칙에 동감을 합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그동안 몇 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켜봤던 것으로는 준비되어 있는 마땅한 인력의 부족이라는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법제화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동시에 유능한 여성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정치적인 측면에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같이 가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희 위원 굉장히 인력은 많은데요.....

○진술인 조성대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저는 전적으로 우리 사회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여성이 정치적으로 50% 대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재의 선거제도가 지역구 중심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다수제 중심으로 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 아래서 여성들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0% 의무화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지역들을 모색하는 게 힘들 거고요. 심지어는 여성 전용 지역구 의견이 나왔습니다만 이 또한 위헌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제도화하기 힘들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합법적이면서 적절하면서 여성의 정치적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은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방향밖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태년 김상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문헌 위원님 하시겠어요?

○정문헌 위원 심 위원님 먼저.....

○위원장대리 김태년 심상정..... 죄송합니다.

심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상정 위원 당이 너무 작아서 안 보이세요?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태년 내내 보고 있다가.....

○심상정 위원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안 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현행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교섭단체에 매우 유리한 특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총액의 50%를 양당이 나눠 갖고요, 교섭단체 양당이. 그리고 5석 이상 비교섭단체 5%, 이게 저희 정의당이 해당됩니다. 또 5석 미만 정당에 2% 배분을 하고 남은 금액을 의석수와 득표수 비례로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제가 정치자금법 개정경과를 봤더니 80년의 정치자금법에는 제도가 달랐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원내 제4정당까지 5~10%를 균등배분하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교섭단체나 이런 고려를 했는데 91년도 법 개정하면서 이 규정 없애고 교섭단체끼리 40% 나눠먹는 개악안이 만들어지고 97년 민주화 이후에 이게 50%까지 올라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선거제도가 단순다수대표제, 승자독식 선거제도 때문에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의석수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배분에도 여전히 이 사표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20석 이상이나 아니냐라는 불합리한 교섭단체 기준을 정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의 득표율 기준보다 우선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엄청난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지금 양당이 어떤 개선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심이 사라집니다, 저는.

(김태년 간사, 이병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저는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미 시행해 왔던 바를 참조해서 우선 원내에 진입한 모든 정당에 일정 비율, 한 10% 정도를 균등배분하고 원내정당 중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정당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균등배분하고 나머지를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다, 국고보조금 배분에 교섭단체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와도 반하는 것이다 저는 그런 문제인식을 말씀드리는데요.

강원택 교수님하고 조성대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진술인 강원택 제가 아까 진술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마는 지금 현재의 방식은 말씀하셨던 대로 선거수준에서도 사표가 발생되고 있고 그 불비례성이 정치자금의 배분에서도 또다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1년에 이게 개정이 됐다면 제 생각에는 3당 합당 이후에 아마 양당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양당을 중심으로 한 형태의 국고보조금 배분 방식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원내 정당체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의 방식은 국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방식으로 개정이 되는 것이 옳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이전 선거에서 득표율을 일정한 수준 이상 획득한 정당에 대해서는 그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되는 방식으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심상정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진술인 조성대 저도 심상정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교섭단체라는 것은 제가 모두진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회 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보조금은 사실 정당의 활동을 국가가 보조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 운영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기준은 폐지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렇다라면 나머지 국고보조금을 어떻게 배분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어쨌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당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성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선거제도가 승자독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당득표율에 따른 배분기준

이 조금 더 무게를 많이 차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정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것은 대표적인 반칙과 특권이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정당후원회가 부활되어야 된다는 문제인식인데요, 정당후원회가 폐기되기 직전인 2005년 한 해 동안 중앙당 및 시도당 후원회 모금 총액이 90억이었습니다, 90억 원. 1등을 한 1등 정당이 어느 당인지 혹시 아세요, 박명호 선생님? 그때 당시 민주노동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0억 중에 62억을 민주노동당이 모금했어요. 그러니까 정당후원회 모금액의 70%를 차지했거든요. 당시 1·2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은 12억, 11억 원 정도 모금을 했어요.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후원금 1건당 금액을 따져 보면 중앙당은 1건당 2만 8000원, 시도당은 9만 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정당후원회 중에서 금액이 가장 적었지만 기부건수는 15만 5000건으로 가장 많아서 기부건수의 93%를 차지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후원이라는 모범적인 정치자금의 모금문화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정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차떼기 불법 대선자금 없애겠다고, 대선자금 투명성 강화하겠다고 도입한 제도 때문에 엉뚱한 희생양이 되어 버리고 말았다 이겁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는 다시 없을 거예요.

국민이 낸 세금 가지고 특권과 반칙으로 교섭단체끼리 나누어 갖고, 그다음에 소액다수로 정당 후원금의 70%를 차지하는 이것 가지고 근근이 진보정당이 당 사업을 했는데 이것마저도 거대정당의 정치자금 투명성을 위해서 다 희생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당의 소액다수를 기준으로 해서 정치자금 기부가 활성화되어야 되고 또 정당후원회제도 부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윤석근 진술인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법인단체 기탁금 허용하자 이런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저의 우려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비지정기탁이라도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모금과 전달의 길을 터주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기탁금 배분기

준이 지금 국고보조금 배분기준하고 동일하잖아요, 그렇지요?

○진술인 윤석근 예, 그렇습니다.

○심상정 위원 그러면 이런 불공정한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이 유지되는 것을 그대로 놔두고 지금 법인단체 기탁금 허용하자, 이것 저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불공정한 선거제도·정치자금제도 이것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될 데가 중앙선관위라고 하면 국고보조금 배분제도에 대한 개정 의견부터 먼저 냐어야 된다, 그게 마땅한 책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당에 유리한 국고보조금 배분제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어떤 개선 의지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윤석근 국고보조금 배분기준 여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실무 차원에서 상당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국회를 움직이는 정당 간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쟁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기보다는 국회 안에서 정당 간에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탁금의 경우에 한해서 법인단체 기부를 허용하자 하는 부분은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지 배분기준에 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정 위원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는데요……

○위원장 이병석 한 1분 더 드릴게요.

○심상정 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으로는 정말 대단히 유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왜 교섭단체 신경 쓰고 원내 정당들의 의견을 고려해야 됩니까? 어떻게 국민주권주의를 잘 실현하는 선거제도 또 어떻게 그 선거제도에 부합하는 정치자금제도 이런 걸 만들 것이냐 이것만 신경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지난번에 안 내놓을 때 오픈프라이머리제도가 도입될 경우에 400억씩이나 써서 선거관리를 국고에서 지원하겠다, 그런 제안을 어떻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할 수 있어요? 그 점을 다시 한 번 지적드리고.

저는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이게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지나가고 있지만, 저희 5석밖에 안 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수당입니다마는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제3당이 아무리 유능하고 애를 써도 도저히 성공할 수 없는 원천적인 독점체제가 현재의 선거제도와 국회 운영제도와 정치자금 배분제도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 정개특위에서 깊이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병석 심상정 위원님께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주요한 이슈들은 곧 관련 소위에서 보다 깊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함께 참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발언을 마무리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주질의에 두 분이 남았습니다, 정문헌 간사님과 김태년 간사님. 그런데 두 분께서는 매우 지혜롭게도 오늘 주질의를 하지 않겠다고 사양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질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태년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병석 유인태 위원님, 오늘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유인태 위원 하고 싶은데 눈치가 보여서, 그냥 끝내지요.

○위원장 이병석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별위원회가 실시하는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진술해 주시고 답변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제시한 다양한 고견들은 향후 우리 특별위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심사하는 데 매우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당·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5인)

경대수	김기식	김명연	김상훈
김상희	김윤덕	김태년	김희선
박대동	백재현	신정훈	심상정
유인태	이병석	정문헌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수철
전문위원	이창립

○출석 진술인

강원택(서울대학교 교수)
박명호(동국대학교 교수)
윤석근(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
임성학(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성대(한신대학교 교수)